

# 부자증세 ‘여론錢爭’

〈전쟁〉

## 민주 ‘핀셋 증세’ 공론화...한국당 “대기업 옥죄기” 반발

### 국민의당·바른정당 무작정 반대보다 대안 제시에 무게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실행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부자증세론’에 대해서도 차분히 입장을 정리하며 여론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며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정기국회까지 긴밀한 당정협력 속에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제별로 전담하는 의원들을 두는 ‘의원 책

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100대 과제 가운데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민생·개혁 분야에서 우선 추진 법안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또 정기국회 직전인 내달 25~26일에는 당 의원들은 물론 내각에 진출한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서 집권 1년차 정기국회를 몰 샐 틈 없이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 소요 예산에 대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이어가는 동시에, 증세 구간 신설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예상치나 경제파급 효과 등을 정밀하게 계산하면서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일부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24일에는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 논의와 관련,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야권은 무작정 증세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며 원칙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는 대기업 옥죄기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고 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증세 논의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증세의 범위와 수준, 실효성을 문제 등을 본격 토론할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로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상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어서 일단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무작정 반대보다는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하나

###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추진 ... 일부 주자들 최고위로 전환할 듯

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단일지도체제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당에 제안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지도체제 개편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 제안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고위원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나타나면서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분리선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당대표

낙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23일 “일부 주자들 제외하면 당락 가능성을 고려해 최고위 출마로 눈을 돌릴 이들이 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력한 당권 후보로는 전정배(63) 전 대표와 정동영(64) 의원, 문병호(58) 전 최고위원, 김한길(64)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27~28일 청와대에서 기업인과 대화

###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에 나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대 그룹과 대한상의 회장,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한다”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

석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 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형식적인 방식에서 탈피,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국회는 24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힌 의견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2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답변이 지난 21일 공개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면서 격양된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부문을 주도했던 같은 당 박병계 의원도 “문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우여곡절 추경 통과...與 불참의원 26명에 비난 쇄도

### 재적 과반 안돼 한때 무산 위기 한국당 일부 참석 겨우 처리 바른정당 “이게 말이 되나” 국민의당 “여당이 너무 무능”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표결 처리 막판까지 의결정족수 문제로 무산 위기를 겪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석을 못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여야는 전날 밤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막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합의로 22일 오전으로 본회의의 일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께 본회의의 표결에 들어갔지만 재적 299명의 과반인 150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합쳐도 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한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민주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의 출석률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뒤늦게 참석하면서 추경안은 가까스로 처리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고맙다 장제원”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종료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은 서면 논평을 통해 “120석의 거대 여당인 정부 여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을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으니 도대

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인 장제원·김현아 의원은 당론과 무관하게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소신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영업가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0개)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직매 010-7384-7800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 주차 완비  
보 1천만, 월 70만

1억 6천 → 1억 1천용 5천)

###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101평, 건 223평  
1층 (상가) 코너자리  
월세 500 이상  
▶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9억8천

동구 계림동 (어린이집)  
토 109평, 건 183평  
대단위 아파트인근  
▶ 감정가 5억6,700만 →  
최저가 5억6,700만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지 138평, 건물 496평  
(아파트입구 상가)  
▶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2억2천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층 코너자리  
월세 500만  
▶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062-527-7600

###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직원모집**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주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서구 금호동 쌍용예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1억4천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젠시빌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6670-9800